

# 여야 극한대치 개헌 무산...국회 '정치력 실종' 비판 초래

### 2018·2020년 이어 또 투표 불성립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 후반기에 재논의...합의 여부 주목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이 지난 8일 무산되면서 22대 국회가 다시 개헌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날 개헌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예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칫 개헌 논의 장기화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쟁점이 될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설득에 총력을 다했지만 끝내 국민의힘 동참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과 2020년 국민발안제도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회 통과를 위해 재차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이 무산된 배경으로는 대화와 협치가 사라진 정치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법, 사법개혁안, '노란봉투법' 등 각종 사안을 두고 충돌만 반복하면서 정쟁 요소가 적은 개헌에도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속의 없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에는 정쟁 때문에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여야는 개헌안 처리 무산 이후에도 서로를 향한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민의 판단 기회를 빼앗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후반기에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하반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개헌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 국회의장이 당연히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시 협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의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를 두고선 회의론이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돌입할 경우 각계각층의 이견이 분출될 수 있어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현행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 방식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개헌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다.

2028년 23대 총선까지 약 2년 동안 전국단위 선거는 없다. 이 사이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안만을 갖고 찬반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과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 민주, 地選 선대위 출범...본격 선거체제 전환

### 명칭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대위'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3 지방선거를 2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목표는 높게 잡고 태도와 자세는 낮게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자세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선대위 명칭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대위'로 확정됐다.

정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나, 그 굴레에 발목 잡혀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며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윤 어게인' 공천으로 다시 내란을 꿈꾸는 저 오만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드시 승리해 내란의 싹까지 잘라내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당이 공천한 공약단체장, 기초단

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이재명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가 톱니바퀴처럼 어긋남 없이 맞물려 돌아갈 때 '5국 3특'의 지방주도성장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은 중앙 조직은 슬림화하는 대신 지방 조직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임선대위원장은으로는 한병도 원내대표, 이시종 전 총부지사, 안신하 세계보건기구(WHO) 기구·AI·건강 분야 자문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TK 장녀'로 이름을 알린 대구 출신 외과 의사 금희정씨, 미안마 출신 귀화 한국인인 이본아씨가 이름을 올렸다. 이연주·황명선·강득구·이성윤·문정복·박지일·박규환 최고위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화력을 보냈다.

지역 유세를 총괄하는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는 배우 이원종씨가 임명됐다.

지역별 유세 책임자 배치도 완료됐다.

서울은 전현희 최고위원, 경기는 이연주·강득구 최고위원, 인천은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맡는다. 황명선 최고위원(부산·충남), 김병주 전 최고위원(강원), 박법계 의원(대전·세종), 양승조 전 충남지사(충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충북), 이성윤 최고위원(호남), 문대립 의원(제주), 박규환 최고위원·김병주 전 최고위원(대구·경북), 문정복 최고위원·김두관 전 경남지사(울산·경남)도 각 지역에서 유세를 돕는다. /연합뉴스

## 박균택 '재판 지연 차단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피고인의 행방이 6개월간 확인되지 않아야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막지 못했고 재판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공판 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은 형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는 재판 지연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 장기 미제사건 해소와 범죄 피해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의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 조인철, '사법개혁' 공로 당대표 1급 포상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혁위) 활동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사개혁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2월 법외 폭죄(형법)와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진수 기자



# 건강검진

##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